

8000원 무전취식 '구속' 법 집행, 이게 최선일까?

광산경찰은 8000원짜리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자를 13일 구속했다.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인데,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다. 검찰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산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음식값 1만 7000원, 1만9000원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을 무전취식 혐의로 구속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게 최선일까.

생활고형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면서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출소하고도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고 삶은 나아지지 않으니 범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법적 조력과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 출소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계비 지급 건수는 지난 2018년 255건을 시작으로 320건(2019년), 460건(2020년)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년 전에 비해 무려 80.4%가 늘어난 것이다.

북구도 74건(2018년)에서 95건(2019년)→161건(2020년) 등으로 급증했고 동구도 2019

경찰 “누범기간에 동종전과 많아”

출소 이틀만의 무전취식자도 구속
뇌물수수 경찰은 영장 신청 안해

출소시 생계비 지급 방안 필요
전문가들 “엄벌만이 상책 아냐”

년 34건에 불과하던 데서 지난해 87건으로 증가했다.

생계비 지급이 출소 후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3일 내로 지급되는데, 지급액도 매월 47만 4600원씩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가 막막한 출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수감생활의 생계비에 후불 형식의 주거비도 매월 최대 38만 7200원씩 받을 수 있는데도, 8000원짜리 식비를 지급하지 못해 구속되는 일이 빚어진다. 점에서 제도가 출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별조계 분석이다.

경찰의 무심하고 기계적인 법 적용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정상을 잠작할 만한 사유를 들여다보고 이같은 제도를 안내했다면 8000원이나 2만원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

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무마해주기라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한 현직 경찰에 대해서는 제 식구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가 하면, 법원이 기아차 취업사기로 수감생활을 가로친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와도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점 등을 들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엄중함만 듣대지 말고 사법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법의 받침을 메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생계비·주거·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만큼 처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범죄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홀로 서기 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최근 경찰의 행태는 시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가는 모양새다”면서 “민중의 지방이라는 경찰들이 뿌리깊은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갈수록 커져가는 경찰권력에 대한 비판·견제·감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현장 검증한다

법원, 화물차 기사 과실 정도 조사

8.5t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기소된 A(55)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차량이 피해자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측 주장을 감안, 운전석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를 현장검증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현장검증 실시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인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네 모녀 중 엄마가 차량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모차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건너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차량 높이로 인해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들 입장을 고려, 법원 양형조사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두석 장성군수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회식자리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 모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내세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더해 회식 참석자들의 이목이 유 군수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테이블 높이(32cm)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통상적 자세보다 허벅지 위치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유 군수와 피해자 등을 제외한 9명의 참석자 중 1명도 추행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에 박정보·자치경찰부장에 김영근

경무관급 68명 전보 내정 인사

광주청 수사부장으로 박정보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장이 내정됐다. 경무관으로 승진한 김영근 전남청 경무과장도 광주청 자치경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광산서장은 김광남 충남청 수사과장이 맡게됐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본청 치안상황관리관에 김종보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급 68명에 대한 전보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박정보 신임 광주청 수사부장은 진도 출신으로 지난 1994년 경위로 임용(경찰간부 후보 42기)돼

2014년 총경에 올라 진도서장,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사이버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함평 출신인 김영근 광주청 자치경찰부장은 석산고와 경찰대(67)를 졸업한 뒤 1990년 경찰에 입문, 지난 2013년 총경으로 승진해 보성서장·광주동부서장·광주청 정보과장·목포서장 등을 역임했다.

김광남 신임 광산서장은 충남 출신으로 천안복일고와 한양대를 거쳐 1944년 경위로 임용(경찰간부 후보 42기),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해 고흥·완도서장 등을 지내고 충남청 수사과장 등을 맡았다. 경찰은 조만간 총경 전보 인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의계약 물의 백순선 북구의원

광주 시민단체, 자진 사퇴 촉구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북구의원 백순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진보연대·시민단체협의회·참여자치21 등으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백순선 의원은 더 이상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백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

민과 시민단체 인사를 검찰에 고소했는데 최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면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죄는커녕, 주민을 상대로 보복을 감행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백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1년 가까이 수천만원을 몰아준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면서 “주민을 겁박하고 양갈음을 시도한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와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들에게 정치적 재의가 갈려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동시장 방역작업
광주 양동시장의 한 상가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시장 통행로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구 대인동, 싹 땀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